

중앙당도 못말린 광주시의회 갈등

민주당 중앙당도 광주시의회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17일 오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한화갑 대표와 정오규 지방자치위원장,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18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시의원 간담회'를 개최,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중재의 자리를 마련했으나 다수파와 소수파 의견이 팽팽히 맞서 갈등은 원점만 맴돌았다.

이러한 실패는 한 대표가 이날 인사말에서 "다수파와 소수파가 대표를 뽑아 타협을 하거나 중앙당에 해법을 의뢰하면 타협안을 제시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벌어진 비공개 토론에서 소수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전원 사퇴, 원점에서 다시 원구성을 해야 한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고 다수파의 의원들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의장 선출이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맞섰다. 소수파 의원들

■ 한화갑대표-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간담회

소수파 "원구성 다시해야" 다수파 "신임 투표하자"

한대표 "독식은 없다" 소수파에 편향... 예견된 실패

은 또 "중앙당 의견을 따르자"고 제안했으나 다수파는 "시의회 자체에서 해결하자"며 반대했다.

이처럼 전체 토론에서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하다 소수파로 나눠 의견 절충을 본 뒤 오후에 대표만 다시 만나 타협을 하자는 선에서 오전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견조율을 마치고 오후에 다수파는 진선거 운영위원장, 소수파는 김철출 의원을 대표로 뽑아 다시 협상을 시도했다. 이 때

다수파는 "민주당 시의원 1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식적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신임 투표를 해서 이를 따르도록 하자"는 안, 소수파는 "전원 사퇴 후 소송 취하"라는 기존안을 각각 협상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도된 중재=이날 민주당 중앙당의 중재 실패는 예견됐다. 중앙당이 소수파 쪽에 무게 중심을 실어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날 정오규 위원장이 양

측의 의원들을 만나 제시한 안도 소수파의 주장인 "의회 지도부 전원 사퇴 후 소송 취하"였다. 때문에 이날 시의회 내에서는 '광주시의회 비주류가 중앙당에서는 주류고, 시의회 주류는 중앙당에서 오히려 비주류'라는 우스갯 소리가 떠돌기도 했다.

한 대표가 이날 정 위원장보다는 한발 나가 "국회에서도 날치기는 있었지만 한 번도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는 암시를 했다. 그러나 그는 "하지만 국회에는 (다른 당 의석) 수가 적어도 특정 당의 독식은 없다"며 다수파의 독식을 비판했다.

하지만 다수파는 한 대표의 안을 '승리하면 전부를 얻고 패배하면 전부를 잃게 되는' 광역의회 의결 선출 과정의 관례를 무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이제 와서 자리 배분하자는 것은 누군가의 살신성인이 요구하는 것이어서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한화갑대표(왼쪽)가 17일 오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시의회의장 선출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의회 내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직도 사격장 '제2 평택사태' 되나

국방부 '자동정밀채점장비' 설치 산지전용허가 신청

주민·시민단체 "시민 동의없는 사격장 확대 반대"

군산시 직도의 사격장 문제가 '제2의 평택사태'로 비화될 조짐이다. 전북 군산에서 서쪽으로 59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3만여평의 이 작은 무인도는 1971년부터 한·미 공군기를 위한 사격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자동정밀채점장비'(WISS)란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 측은 하루속히 WISS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인근 주민과 반미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매항리 사격장의 대체지로 직도를 확대, 활용하려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논란은 한·미동맹 저해요인으로까지 확대 해석되면서 급격히 커지고 있다. 미군측에서 "직도 사격장 문제가 계속 지지부진하면 다른 나라에 나가서 훈련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을 강화하자 국방부가 16일 직도 공대지사격 훈련장에 WISS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군산시에 신청했다.

국방부는 나아가 군산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직도 소유권을 산림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전환'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직도 사격장 훈련시간 비

율은 원래 8대2였는데, 양국은 매항리 폐쇄에 맞춰 이를 7대3으로 조정했다. 문제는 미군이 이곳에 WISS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군산발전비상대책위'소속 회원 10여명은 오는 21일께 한·미 공군의 사격 훈련을 저지하는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속칭 '직도 상륙작전'을 감행키로 했다.

전북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직도사격장폐쇄와 군산미군기지 확장저지를 위한 전북대책위'도 16일 성명을 통해 "국방부는 미군의 들러리로 나서지 말라"며 "군산 시민의 동의없는 직도사격장 확대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대책위는 오는 18일 군산 농협에식장에서 '매항리사격장 직도 이전 저지를 위한 군산지역 시국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조만간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반면 반대의 목소리를 경계하는 경우도 있다. 17일 민주당 군산시 지역위원회(위원장 엄대우)는 성명을 통해 "일부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외부 세력과 연대해 반미를 선동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미 작전협조본부' 창설 책임자 소장급 이상으로

국방부 국회보고

한국과 미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 환수를 계기로 기존 한미연합사령부에 버금가는 '전-평시 작전협조본부'(가칭, 이하 협조본부)를 창설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조본부는 작통권 환수와 맞물려 구성될 한국군과 미군의 독자사령부간 협조기구로, 조직과 인력 면에서 한미연합사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창설될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17일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현안업무' 자료에서 "한미간 긴밀한 군사작전 협조를 위한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간 협력 체계 구축 차원에서 협조본부를 창설키로 하고 이를 협의 중"이라며 "협조본부는 연합사에 버금가는 강력한 신 한미 공동방위체제의 핵심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구가 발족하면 기존 연합방위체제는 '공동방위체제'로 전환된다.

국방부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새로운 한·미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로드맵 초안에 담았다"면서 "공동방위체제는 합참이 한반도 전구사령부 역할을 수행하고 주한미군사령부가 이를 지원하는 지휘관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또 협조본부 예하에 10여 개의 상설·비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양측 장성과 영관급 장교를 같은 비율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협조본부의 최고 책임자 구성과 계급은 현재 협의 중이지만 한국군과 미군의 소장급 이상 장성이 공동으로 맡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박주선 광주 동구로?

광주지역 정치권 일각에서 5·31 지방선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박주선 전 의원의 광주 복귀를 추진하고 나서 향후 박 전 의원의 거취가 주목된다.

광주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동구 일부 당원들을 중심으로 박 전 의원을 공석중인 동구지역위원장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영입작업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들은 '호남 정치 1번지'로 불리었던 광주 동구의 영향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박 전 의원 같은 중량급 있는 인사가 지역 위원장으로 선임돼야 한다고 주

민주당 일부 당원 영입추진

장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박 전 의원을 광주에 초청, 지역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의 전화통화에서 "당원으로서 당이 명령한다면 수용을 적극 검토해야 하나 아직까지 당에서 제의가 없어 동구지역위원장 및 광주시장 위원장직 등은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지역 일부 지역 위원장들이 이제 서울에서 정치를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마음을 정한 바 없으며 일단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秋미애 21일 귀국

대학서 강의 주력할 듯

추미애 전 민주당 의원이 2년간의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오는 21일 귀국한다. 추 전 의원측은 17일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추 전 의원이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의 연구 활동을 마치고 21일 귀국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탄핵 역풍'에 휘말려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도미(渡美)했던 추 전 의원이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국내 무대에 '컴백'하는 것이다. 추 전 의원은 귀국 후에는 일단 국내 대학에서 강의 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객원교수로 있으면서 한미와 남북관계 해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만큼 학문 활

동을 중심으로 국내 생활에 적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추 전 의원은 "추 전 의원은 귀국 후 9월 학기부터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으로서 연구활동을 하고 국제학대학원과 학부에서 '동북아시아 국제관계'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추 전 의원이 현재 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고, 현 여권 핵심인사들과도 가깝기 때문에 대학강단 활동을 전개 복귀를 위한 '정중중' 행보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최진만기자 man21@



Advertisement for 'outlet' featuring clothing and shoes. Text includes '최일모직 outlet 전대입구 사거리' and '60~40% 할인'.

Advertisement for '전남고시학원' (Jeonnam Gosihakwon) for public service exam preparation. Text includes '7.9 공무원', '경찰직', '중개사'.

Advertisement for '전통 침술·뜸' (Traditional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ervices. Text includes '무료 강좌' and '중국문화원'.